

초 점

지난 12월3일 미 법무성이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군 전범 용의자들에 대해 내란 입국 금지 조치가 국제 정치무대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 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은 물론 그동안 한국 사회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외쳐온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이보다 더한 성과가 없었다. 특히 이번 조치가 나오기까지 미국의 수도인 이곳에서 4년여 애를 써온 워싱턴정대위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일본 전범 입국금지 조치의 의미와 어간의 진행 과정을 워싱턴정대위의 이사장 이종연 변호사가 기고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미·법무성은 1996년 12월3일 제2차 대전시 소위 정신대와 인간 생체 실험에 관련된 일본군을 전범으로 규정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그 범행의 증거가 있는 16명을 감시명단(watch list)에 올리는 조치를 취하였고 계속 증거가 수집되는 대로 그 감시대상 인원수는 증가할 것이다.

이번 일에 직접 일선에 나섰던 본인은 공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미

정신대 문제 해결의 큰 전환점

일본 전범 입국 금지

변호사 이종연(워싱턴지역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이사장)

미 법무성 조치가 나오기까지



속하기로 했다.

1995년까지만 해도 미국정부는 정신대 인권유린에 대한 대책에 있어 세계흐름에서 뒤쳐져 있었다. 특별수

부의 태도에 대한 규탄이 있었다.

금년 초에는 제네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구마라스와미 변호사의 보고서가 전체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12월3일 법무성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일본정부와 일본인들은 불쾌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왜 50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일본을 표적으로 (비록 형사조치는 아니지만)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미국의 입장이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한 미국도 전쟁범죄를 자행했으니 일본도 원자탄과 관련된 미국인을 조사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도 있다고 간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대다수 일본인과 그 정부는 끝끝내 자기들의 만행을 참회하여 사죄하려 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주장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법무성의 조치는 일본과 타협할 수 없는 외교적 문체가 될 것이다. 설사 일본 정부가 정부예산으로 정신대 할머니들을 보상한다고 하여도 법

법무성의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그 의미를 교포 여러분에게 밝힘으로써 이해를 돕는 한편 성원과 격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 법무성 결정의 책임부서는 「특별수사국」(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 OSI)이고 일라이 로젠밤(Eli Rosenbaum)이 국장을 맡고 있다. 그 아래에 여러 명의 변호사, 수사관과 직원이 있다.

1979년에 제정된 소위 홀츠만 법안에 따라 설립된 특별수사국은 주로 독일 나치 전범들을 조사하고 수사하여 입국 금지 조치하고 이미 입국했으면 추방을 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일본군 전범자는 아직까지 대상이 되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1995년 봄에 워싱턴변호사협회의 인권 세미나에 로젠밤 국장이 참석, OSI의 기능을 설명했고 또 이민법 212조 (a) (3) (e)항이 독일 나치와 그 동맹국의 전범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토론하였으며 또한 나치와 동맹국이었던 일본 군인에게도 증거만 있으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50명 가량의 변호사들이 참석한 그 토론장에는 워싱턴정대위(회장 이동우)에서 활동해 온 본인과 아메리칸대학의 크리스 심슨(Christopher Simpson) 교수가 있었다. 일본군과 관련된 정신대 문제에 대해 로젠밤 국장은 우리와 계속 접촉, 논의를 계

사국이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을 결정하려면 우선 법무장관을 위시한 법무성 간부들을 설득, 그들의 재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국무성과 기타 정부관련 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996년 2월 작성된 결정 초안이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는 10개월이 걸린 것이다. 초안 서류가 국무성을 비롯한 타부처에서 상당히 약하게 수정될 것이라고 전해지기도 했었다.

이 초안을 법무성으로부터 받은 국무성은 일본정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연구 고려하겠다고 했으나 12월3일 법무성 발표 직전까지 아무런 회답이 없었다. 이날 입국금지 조치 발표 전 일본정부는 외교적으로 항의를 했으나 해결을 못 보고 법무성안대로 발표가 된 것이다.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근래에 거세게 드높아지는 세계인권 특히 여성인권 운동에 자극된 면이 크다.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단체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법률가협회가 있다. 정신대에 관한 일본의 범행을 조사하고 국제법상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전쟁범죄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세계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는 단체인 국제법률가협회가 94년 1월에 채택한 보고서는 이번 법무성/발표문에서도 인용되었다.

이후 1995년 가을 워싱턴정대위도 참가했던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정신대 문제가 논의되었고 또 일본 정

가 그 보고서를 'note'하였다.

올들어 타임지 아시아판은 정신대 문제를 대대적으로 다루면서 파렴치스러운 일본정부의 무마 전략을 지적했다. 특집 화보를 기고한 한인2세 사진기자 김윤희씨가 보도문에서 정신대 할머니들을 '내 어머니, 내 할머니'로 표현하여 독자들을 감동시켰던 보도였다.

9월초 바니 오(오봉암) 교수가 주관한 조지타운대학의 정신대 세미나는 저명한 대학이 이 문제를 부각시켰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여러 교수들과 전문가들로서 구성된 심도 깊은 주제토론으로 큰 효과를 거두었다.

여기에 워싱턴정대위의 주선으로 세미나에 참석했던 김윤심 할머니가 법무성 특별수사국 검사와 수사관들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된 사실이 특기할 만하다. 이 자리에서 오히려 할머니는 차근차근 증언을 하는데 반해 통역을 맡은 최상미씨가 눈물을 참지 못해 증언이 중단되는 등 면담 모임은 숙연함으로 일관했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후에 이 할머니의 증언을 일본 외교관들이 경멸시하는 표현을 함으로써 미 법무성의 태도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종전 50주년을 맞아 워싱턴정신대대책위원회가 마련하여 워싱턴을 비롯, 미주 여러 지역을 순회한 사진 및 자료 전시회가 미국 여론에 강한 호소를 했

무성의 입국 금지 조치는 계속 존재할 것이며 지속적인 조사와 인권단체의 자료 제공으로 전쟁범죄를 범한 더 많은 일본제국군 출신들의 이름이 watch list에 늘어날 것이다.

여러 나라들이 국내법으로 제2차대전 전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서 지금도 증거가 나타나면 자국민이거나 타국민을 가리지 않고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러한 법이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전범을 '모신'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수상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참배하고 있고 교과서에서는 정신대 관련 잔악행위 내용을 삭제하려 하고 있다.

이번 미국 법무성의 조치는 일본의 부당한 과거행위, 그리고 최근 더욱 기승을 부리는 국수주의적 경향과 정면으로 충돌할 것이 틀림없다.

이런 역사의 투쟁 속에서 미 법무성의 이번 조치는 정신대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 바이다.

역사의 큰 물결로 볼 때 이번 조치는 미 법무성이 결정한 것이지만 워싱턴정대위를 위시해 인권운동에 수고하신 여러 사람들의 희생적 봉사가 도출해낸 것이나 다름없다. 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린다.